

좌담

교육계에 새 담론이 필요하다

연제 2000년 7월 24일 오후 6시

어디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회의실

사회 송원재(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본지 편집위원)

참석자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거용(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위원장)

이수일(서울 잠실고등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장신미(서울 난곡중학교 교사)

정은교(서울 금옥여자중학교 교사, 진보교육연구소장)

학교의 위기, 어디에서 왔는가

사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국가통제와 관료행정은 옛날 그대로인데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리가 새로이 교육계를 덮쳐 왔고, 풍나물 교실은 그대로인데 무한경쟁의 세계화 논리가 교육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교실붕괴’라고 말하는 학교 전반의 무력화 현상이 견잡을 수 없이 변졌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학부모는 ‘왜 교사는 변화를 거부하느냐’며 거침없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또 정부에서는 ‘교사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며 교직발전 종합안이나 7차 교육과정이니 서술 퍼렇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기존의 교육담론은 설득력 있는 진단과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좌담은 문제의 근원을 짚어 보고, 새로운 담론을 찾는 자리입니다. 먼저 요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장심미 요즘 아이들은 한 마디로 ‘통제불능의 아이들’이라고들 합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교사의 지도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일은 다반사고, 교사들 중에는 ‘지도는커녕 도대체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간에 제대로 대화도 안될 만큼 소통의 단절 현상이 심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 기간제 교사 한 분이 학교를 떠났어요. 평소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쓴 분인데, 사소한 일로 아이들과 감정이 부딪혔나 봐요. 아이들이 투서를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당사자는 이 일이 왜 이토록 커져 버렸는지 이유도 모른 채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주변에서는 이 일을 두고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교칙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도 바뀌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공론화 되지 못하고 ‘당사자의 불행’이나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뭐 그런 식으로 치부하

고 쉬쉬 넘어간다는 거죠.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수일 저희 학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비교적 젊은 교사 한 분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이제 지쳤다. 학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못된다. 이 삼 년 전부터 한계를 절감해 왔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교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사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아이들과의 소통단절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데 통제가 될리 없고, 통제가 안되니 수업을 진행하느라 무진 애를 먹지요. 일단 수업이 성립해야 인성교육이든 뭐든 시도해 볼 텐데, 이걸 수업이 진행이 안되니 도무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을 무섭게 휘어잡는 교사는 또 그런 대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뭘 하든 관심없는 교사는 문제도 없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교사들입니다. 참고 참다가 한계 상황까지 오면 폭발해 버리고, 그러면 꼭 사고가 나서 112 신고다 뭐다 문제가 되거든요(웃음). 우스갯소리로 전에는 선생들이 모이면 교장 욕을 했는데 요즘엔 선생들이 모이면 아이들 욕을 한다고들 합니다.

사회 무너지는 교실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은 교사들이겠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지, 무너진다면 과연 무엇이 무너지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춘 교실붕괴 현상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설득해 내고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해 왔던 기존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부수적인 현상

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의 교육은 국가통제와 입시경쟁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버텨 왔는데, 지금 그 기둥이 흔들리는 거지요 국가통제라는 채찍은 이전보다 매서운 맛이 많이 사라지고 일류대학과 계층상승이라는 당근도 덜 달콤해진 상태라서 교육에 대한 기존의 통제수단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적당히 뭉개도 학교에서 어찌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교사의 일방통제가 학생들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박기용 통제와 입시가 지배하던 교육체제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신화화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배체제가 무너진 지금은 그 실체가 노출돼 버렸어요 ‘통제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이걸 단절이고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건데, 옛날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참 당황스럽지요 그렇지만 달리 보면 이걸 진정한 소통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과거 입시교육할 때 무슨 소통이 있었습니까? 두발 단속이다 복장 불량이다 일방통행만 있었지 소통은 없었어요 지금이 과도기라 너무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양상으로 터져 나와 걱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교사들도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계층 상승 이데올로기나 퍼뜨릴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은교 교실붕괴를 둘러싸고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좀 견디기 어려운 가벼운 담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게 교사 탓’이라는 교사 책임론이랄지, ‘교사와 학생간의 문화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세대차이론이 있어요 듣기에는 그럴 듯하고 나름대로 약간의 진실을 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문제를 사회 위기와 연결지어 바라보지 못하고 교사와 학생의 문제로 국한시켜 생각한다면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저는 분석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전체 사회 속에서 학교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해법이 나오지, 교사 책임론이나 세대차이론 가지고

김동춘

국가통제라는 채찍은 매서운 맛이
사라지고 일류대학과 계층상승의 당근도
덜 달콤해진 상태라서 통제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는 해결은커녕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조차 밝혀 낼 수 없어요.

이수일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이 커지면서 학교가 누려 온 독점적인 권한과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직업 시장은 갈수록 다변화하는데 학교가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실업교육은 지금 실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교육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고유 가치를 다시 살리고 거기에 맞춰 교사의 역할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성보 사실 침묵의 문화가 여지껏 학교를 지배해 왔지요. 나눠 준 교과서 가지고 짜 준 시간표대로 교사가 떠먹여 주면 능력껏 소화시키다보니 모든 게 획일적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문화가 지금 자율과 소통의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거침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학생들이 뽐어내는 익명의 항의와 비난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유있는 저항도 있지만 ‘무조건 싫다’는 식으로 마구 나가는 면도 있어요. 저도 학기초 강의시간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학

장신미

과외받는 애들은 수업 때 놀고 난리쳐도
학습 결손을 메울 수 있지만, 배울 데라곤
학교밖에 없는 아이들은 숙절 없이 놀다가……

생이 앞으로 나오더니 다짜고짜 저를 밀어내더니 교탁에 서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제 강의내용과 의견이 달랐던 모양인데, 질문이나 절차 같은 건 몽땅 생략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내려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은교 교사의 전문성을 말할 때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를 놓고 따지는데, 저는 교사의 전문성이란 ‘아이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눌 줄 아느냐’ 하는 소통능력이라고 봅니다. 교육학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그 말은 교실 붕괴라는 현실과는 따로 노는 공허한 이론이고, 막상 교사의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디론가 증발되어 버립니다. 교사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유난히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상당부분 해결되겠지요

장신미 지난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었을 때 밑으로부터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악화되었겠는가 싶어요. 교실붕괴는 필연적인 면이 있지만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절망감이나 걱정은 정말 심각합니다. 일단 수업이 안되고 학생지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심성보

삼품은 한 번 불량품이 영원한 불량품이지만
학생은 자기혁신을 통해 내일은 새 인간이 됩니다.

이 전부인 아이들과 학교교육이 일부인 아이들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학습 결손을 메울 수 있지만, 배울 데라고는 학교밖에 없는데 속없이 떠돌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은 학습 결손이 그대로 누적됩니다. 이 차이가 결국은 불평등한 계층구조로 뿌리내릴 거예요. 저희 학교에는 도시빈민의 아이들이 많은데,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겨우 이삼십 퍼센트인데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도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안타까워하지만 어쩔 줄 몰라 손놓고 있어요. 아이들은 선생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그러고 싶은 애들도 분위기상 포기하는 거죠. 교실붕괴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교사들은 내일 당장 교실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붙들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실붕괴의 결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돼요.

김동춘 우리나라처럼 교육이 ‘정치의 일부’였던 경우는 달리 없었습니다.

이수일

학교나 사회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어
상당히 최면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 공교육이 파탄납니다.

모든 교육문제는 첫 출발부터가 ‘정치문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교원노조를 인정하면 공무원노조도 인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교육에 대한 국가독점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죠. 국가주의 교육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국가가 제시해서 밑으로부터 자생적인 교육이념과 방법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 분단과 결부되어 공교육의 인프라 형성에 국가가 신경쓰지 않도록 해 주는 핑계였지요. 또 다른 면에서는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국민통합의 전략으로 입시를 통해 경쟁과 성공의 신화를 피지배 계층에 주입하고 지배질서를 정당화시켜 주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화급당 학생수가 안 줄어드는 까닭은, 경직성 예산인 국방예산을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복지는 한 걸음 내딛기도 벅차기 때문이죠. 모든 통제권을 국가가 독점한 상황에서 교사나 학교의 요구가 밀고 올라갈 조건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가가 독점하고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퍼블릭(public)’

박거용

신자유주의는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부담을 좀 줄여 보자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일찍이 초과달성한 나라 아니냐. 선진국은 80%가 많아서 줄이자는 건데 우린 16%마저 자르겠다는 거예요.

은 없는 셈이죠. 실제로는 아닌데 국가가 혼자 ‘퍼블릭(public)’이라고 선포하고 교육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독점기능이 무너졌을 때 모든 교육은 사적인 영역으로 가 버리는 거고, 교육에서의 퍼블릭(public) 곧 공교육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독점적 국가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유주의가 병존하고 있는 우리 교육체제는 입시경쟁과 국가통제라는 두 개의 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육주체들은 ‘홍익인간’이다 뭐다 말로는 떠들었지만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공론의 장에서 한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교육위기라는 것도 국가주의의 붕괴 속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아까 장신미 선생님 말씀처럼 전교조가 생겨나서 밑으로부터 교육개혁을 주장했을 때가 중요한 기회였다고 보는데, 그게 실패한 탓에 90년대에 교육위기가 커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사·학부모·학생 할 것 없이 얼마큼 잘못은 있겠지만, 교육과 정치, 지배질서 재생산 기체로서의 교육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나아질 게 없어요.

정은교

이런 기막힌 이야기들이 교육학계에서 공론화되고
힘으로 결집해야 분위기도 바뀔 텐데
이런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학계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의 허구

사회 근대 공교육 체제에서 국가라는 존재는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지어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동춘 선생님께서는 교육위기 문제를 국가주의의 붕괴와 연관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또 시장논리를 앞세워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와도 직결되지요. 먼저 교육에서의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공존’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교육담론으로 세력을 이워가는 시장주의 교육개혁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김동춘 사실 이 자유주의란 일종의 의사(pseudo) 자유주의라고 보는데, 분단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둥은 국가적 억압이지만, 다른 하나의 기둥은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쇼윈도우로서 남한 사회가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라는 것이죠.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곧 시장주의의 공존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미 1950년대부터 통제주의적 교육과 공존해 온 치맛바람 열풍, 입시 열풍의 역사가 90년대의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송원재

교육과정을 국가권력이 독점했을 때 어찌되는지
지난 사대의 불행한 역사에서 우린 너무나 생생히 겪었어요.

지, 우리가 전혀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주의’나 ‘시장주의’라는 것도 정작 ‘수요자없는 수요자 중심주의’입니다. ‘수요자 중심주의’란 말에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교육’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정작 ‘수요자의 욕구’라는 것도 공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것인가’ 하는 점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수요자의 욕구’라는 게 비뚤어진 교육체제 속에서 길들여진 욕구인데, 그것을 전제로 한 ‘수요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결국 교육에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입니다.

심성보 상품은 수요자가 원하면 팔리고 아니면 폐기 처분되지만,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은 상품과는 전혀 속성이 다르지요. 상품은 한번 불량품이면 영원한 불량품이지만, 학생은 오늘은 불량품이지만 내일은 우량품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자기혁신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상품을 다루는 시장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공적

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가는 관심 밖이에요 반면에 교육은 가치있는 지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육은 상품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상품을 들어 말하자면 교육은 공기나 물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지요 대중교육을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할 때, 소수를 위한 교육은 ‘일부 계층만 먹는 약수나 생수’에 해당합니다. 약수나 생수를 만들어 파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깨끗한 수도물은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약수나 생수를 먹으라는 건 잘못입니다. 그건 대중에게 ‘물을 먹을 권리’를 빼앗는 거죠 시장주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근대 역사의 성과물인 ‘대중의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그나마 갖춰져 있는 서구와는 달리 공교육의 기초도 제대로 안돼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지고 나면 사교육 시장이 곧바로 치고 들어올 텐데 그 결과는 공교육 체제의 총체적 파탄입니다. 중상류층은 사교육을 통해 지위를 높여 갈 것이고, 그럴 능력이 없는 대중은 ‘똥통(?) 학교’에서 질 낮은 교육에 만족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기회마저 빼앗기겠죠.

이수일 교육위기 문제가 두드러지게 터져 나온 것은 이삼 년 전부터였습니다. 교육개혁이라는 것도 1995년 5·31 조치부터 지금까지 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교육위기가 이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우리 교육은 위기였지만 정부가 교육개혁에 나서면서부터 사태가 더 심각해졌지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교육개혁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전교조는 작년부터 현정부 교육정책의 기초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학교현장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상당부분 취면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비판적 지식인들

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정부가 앞서가면서 대중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셈이죠. 앞으로 학계와 교사, 시민운동이 연대해서 이걸 막지 못한다면 우리 공교육은 그대로 파탄나는 거 아니냐.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실성보 자립형 사립학교가 마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요. 말이야 학부모선택권을 강화시켜 질 높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선별된 학교는 효율성도 높고 경쟁력도 강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공립학교나 대다수 사립학교는 투자도 안하고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의 경쟁력이란 게 수치로 환산할 성격의 것도 아니고 결국 기능적 가치를 주로 판단하겠다는 얘긴데, 거기에는 ‘수월성(秀越性) 추구’라는 국가의 의도가 은밀하게 관철되고 있다고 봅니다. 공교육체제가 근대화된 선진국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만, 우리 경우에는 다르죠.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이란 건 오래 전에 상실하고 구조적인 부패와 부실로 흔들리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립형 사립학교에게 등록금과 학생선발권 같은 권한을 허용해 준다면, 이걸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점철된 우리 교육사를 볼 때 ‘수요자의 요구’라는 게 솔직히 치맛바람 같은 ‘속물적 요구’인데,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뻔한 일 아닙니까? 자립형 사립학교는 중상류층이 다니는 명문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싸구려 슬럼학교로 전락할 겁니다.

박기용 자립형 사립학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게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국가 부담을 좀 줄여 보자는 건데, 그런 점에서라면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이미 초과달성한 나라가 아니냐 (웃음),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이미 바닥인데 이걸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공허한 신자유주의 논쟁에 너무 끌려 들

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신자유주의 정책이 벌써 현실로 나타나서 우렐 위협하고 있는데 더 될 가지고 입씨름하느냐는 거죠. 신자유주의에 대해 토론할 때는 이런 문제는 먼저 선을 분명히 긋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OECD 국가의 대학 교육 투자비율은 평균 80%, 독일이나 프랑스는 90%, 사립대학이 많다는 미국과 일본도 46%에서 48%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16%예요. 선진국은 80%가 너무 많아서 60%나 70%로 줄여 보지는 건데, 우리는 16%마저 자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공립 대학을 민영화하겠다는니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기업경영식으로 하겠다는니 하는 것은 사실 국공립 대학 몇 개만 뽑아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죠. ‘BK21’이 나올 때 우려했던 게 벌써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1년에 2천억원씩 7년에 1조 4천억원이 책정되는데, 올 해분 2천억원 가운데 절반이 서울대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7년간 총액인 1조 4천억원이라는 것도 IMF 뒤에 백조원이 넘는 돈이 금융지원으로 들어간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거죠.

정은교 이런 기막힌 얘기들이 교육학계에서 공론화되고 힘으로 결집돼야 분위기도 바꿀 텐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학계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요. 요즘 학계 분위기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기껏 고민한다는 게 ‘이 척박한 토양에서 그걸 대중들에게 어떻게 풀어 먹일 것이냐’ 하는 수사학적인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교육잡지에 ‘제3의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는데, 그 길이라는 게 고등교육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초·중등 교육은 국가가 보호한다는 거였어요. 참 대단한 길이죠(웃음). 필자 본인은 절묘한 타협점이라고 말하는데, 기막힌 현실에 비춰 보면 너무 심각해서 웃을 수만도 없습니다. 요즘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도 행복하고 있는 마당에 오리지널 신자유주의를 마치 대단한 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으니……

심성보 얼마 전에 자립형 사립학교 발표가 나오자 어느 방송국에서 ‘이러다가 평준화가 해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토론회를 열어 보려고 교육학자들을 교섭하다가 무진 애를 먹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면에서 반대할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접촉을 해보니까 거의 찬성 쪽으로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자립형 사립학교가 허용되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살 수 없다’고 안이하게 결론을 내려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대세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담론을 생산해 내고 동조하는 사람은 많아도, 현실과 이론의 치열한 긴장 속에서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려는 실천적 담론이 없는 이 풍토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학문의 투항’이라고 봅니다.

교육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사실 교실붕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주의적인 통제가 물러나면서 그 빈자리를 공공의 개념이 배제된 사적 욕구가 채우고 들어왔고, 정부는 그것을 알맞게 통제하면서 미완의 과제인 ‘교육 민주화’를 달성하기보다는 ‘수요자의 요구’를 앞세워 시장논리를 들여오기 바빴던 것이죠. 기본적인 통제도 먹혀들지 않는 무정부 상태의 교실, 자기성찰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하고 내몰리는 교사들, 선량한 수요자의 얼굴을 한 속물적 욕구의 범람,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하는 공교육…… 이런 여러 모습이 무너지는 교실의 파편처럼 떠오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곧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구하는 쪽에서도 특히 7차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론이 이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는데 한 말씀씩 들……

박거용 오늘 창원 지방법원에서 경상대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늦게나마 무죄판결이 나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웃음). 이 사건은 우리 교육에서 학문의 자유, 나아가서 교육의 내용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 틀에 갇혀 있는가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알게 모르게 굳어져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초·중등학교는 지식을 재생산하는 곳이고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학문정책이 따로 구분되고, 교육정책이라면 주로 초·중·고등학교 정책이나 입시정책을 말하고 학문정책이라면 교육문제를 뺀 이론적이고 종합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 검인정 교과서가 줄고 국가가 지정하는 교육내용은 많이 풀릴 텐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재생산한다는 겁니까?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과서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여러 관점과 태도에서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고 나름대로 지적 능력을 생산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지식의 재생산’이라는 굴레에 묶여 지식의 생산기능을 외면했기 때문에 교육 위기가 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만 했지,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는 능력은 길러 줄 수가 없었죠.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가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억압하게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분하니까 자꾸 딴 짓 하는 거죠. 역사 시험을 봐도 교과서의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오픈 북 테스트를 해서 교과서의 자료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세울 줄 아느냐 하는 걸 평가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은교 사실 교과서 문제는 오래된 쟁점이지요 시간이 흘러도 안 바뀌니까 그냥 묻혀지고 새로운 문제가 워낙 급하다보니 옆으로 밀려나 있는 거죠 역시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는 격언이 맞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고통으로 말하자면 국어나 역사 교사보다는 수학교사가 훨씬 더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수학 교사에게는 구구단을 가르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웃음).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나, 설명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문제가 되는 건 국어나 사회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계되는 과목일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국어를 예로 들자면, 이걸 뭐를 고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신미 그런 점은 모든 교과가 다 비슷할 거예요 학교교육을 살리려면 교과서와 교육과정 문제가 핵심인데 이게 왜 안 풀리는가? ‘대학 입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력한 진단이었어요 그렇지만 딱 면도 있는데, 교과서에 담긴 지식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용은 어려워지는데 양은 많아지고 악성 인플레이션이 되풀이된 거죠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교단에 설 때마다 ‘도대체 이걸 왜 다 가르쳐야 하나’ 스스로 회의가 들어요 교사가 그 정도이니 배우는 학생들은 오죽하겠어요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유도 모르고 교과서를 부둥켜안고 씨름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당장 시험에서 문제가 돼요 모두가 교과서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교과서의 양부터 줄이고 쉽게 써야 합니다. 분량도 줄여야 하지만 한 권에 압축되어 있는 지식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웃음) 학문 영역별로 전공 교수들이 교과서를 만들다보니 대학에서 세분화된 영역을 모두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풀어놓으면 정말 엄청난 양이 되고, 교사는 슈퍼맨이 돼야 합니다. 결국 교사는 빠듯한 시간에 원리부

터 전문지식까지 가르치자면 주입식 말고는 길이 없어요 토론식 수업? 좋지요 그렇게 하다가는 반의 반도 못 나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라’,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실험도 하고 체험 학습도 하라’고 해요 이걸 슈퍼맨 가지고도 안돼요 이런 개혁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일 교육과정에 교육목표가 분명치 않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교육학이란 것이 있다면 먼저 초·중·고등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급별로 교육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보통교육은 기초 소양교육이고 고등교육은 전문교육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기본원리를 터득하고 사고의 기본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각 교과목은 자기영역에서 그걸 나눠 맡는 건데, 과연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계선에 와 있는 건 확실한데, 입시에서 그걸 요구하고 사교육의 부추음 받으면서 이 문제투성이 교육과정이 아직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학교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과지도 인성교육까지 무한책임을 떠 안고 파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진로지도가 안 되는 이유도, 진로에 대해 아직 생각도 없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교실에 몰아놓고 끌고가야 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취향과 특기를 가진 아이들은 수업에 방해가 되니 부딪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자기와 관계도 없는 교사의 요구에 당연히 저항하는 건데, 참 갑갑할 노릇이죠 고장난 시스템 속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뒷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요즘 창의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지식교육을 별레보듯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올바른 지식교육은 인성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식교육과 창의적인 교육을 서로 대립시켜서는 안돼요

정은교 교육과정 문제는 입시와도 관계가 있지만, 해당 교과목의 교육학을 꾸려 온 학문집단의 체계나 성격으로 볼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문학에서는 ‘해방 전까지만 다뤄야 한다’는 불문을 같은 게 있습니다. 현행 제도문학권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다보니 현대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해방 후의 문학이나 요즘 사이버문학 같은 다양한 내용은 빠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교과서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데,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 다 못할 테니 수준별 수업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남의 다리 굽는 격이죠 수준별 수업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심성보 우리는 속성재배형 근대화를 겪다보니 질보다는 양 위주로 사고를 해 왔습니다. 지식을 빨리 전수하려다보니 절대적 지식관이 판쳤지요 교사 한 명이 교과서 한 권 갖고 수업하는 근대 교육에서는 이런 진리 체계가 힘을 발휘했겠지만, 상대적 지식관이 팽배해 있는 지금 이런 절대적 지식관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성적 진리’니 ‘열린교육’이니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단지 주입식으로 가르쳐 왔다는 이유로 보편적 가치를 담은 기존의 모든 지식 체계를 몽땅 폐기처분할 듯이 매도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사실 ‘구성적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해 가는 방법 면을 말하는 것이지 지식 자체의 진리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가 마치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거죠 수업 중에 교사가 떠맡을 가치 선택의 역할마저 ‘주입식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있어요 바로 이게 ‘열린교육’의 편협한 면인데 그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은 바뀔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수업은 어디까지나 보편 타당한 가치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교사는 그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판단이 교육적 판단에 앞서다 보니까 주객이 바뀌어서 방법이 내용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 집단이 앞장서서 ‘열린교육을 해야 한다’, ‘수행평가가 최고다’ 진리

를 선포하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교육학자들은 여기 동조하거나 입을 다물고, 교사들은 부담만 잔뜩 짊어지고 쫄쫄매고 있지요.

교육주체들이 설자리

사회 교육과정을 국가권력이 독점했을 때 교육이 정치도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 너무나 생생히 겪었습니다. 교과서에 담기는 지식과 진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교육목표를 정하고 교수학습으로 풀어내는 문제는 전문학자와 교사의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수단이 내용을 규정하고, 방법의 문제가 본질의 문제를 은폐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단을 절대시하는 이런 흐름 자체가 또 하나의 신종 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교육주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를 흔히 ‘교육의 삼 주체’라고 하는데, 학부모와 교육 시민운동 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교육주체간의 바람직한 연대 형성의 가능성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장신미 ‘정년단축 파동’ 때 교사들은 반대가 많았지만 학부모들은 찬성이 압도적이었죠. 결국 정부는 학부모를 등에 업고 교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세워서 관철시켰어요. 이 때 ‘전교조도 반대할 줄 몰랐다’는 등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갈라섰다’는 등, 저는 소통의 단절이 이렇게 깊었던가 놀랐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에 불만이 많다보니까 이 문제를 계기로 쌓인 불만이 터져나온 거라고 여기지만, 이게 원래 그렇게 대립될 것인가요? 또, ‘학부모’라고 하지만 그 주체는 사실 분명치 않잖아요? 중상류층도

있지만 서민층 학부모도 많고, 그들 요구가 다 같은 건 아니죠. 비교적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중상류층의 요구가 마치 학부모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왜곡되는 일이 많아요. 또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냐’ 하는 것도 살펴 봐야죠. 수요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처럼 학부모도 더 질 좋은 상품, 더 나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기겠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 좋은 학교에 보낸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된 요구라는 점을 볼 때, 그런 속물적 요구에 의해 공교육이 좌지우지돼도 좋으냐는 거죠. 적어도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려면 개별 이해관계를 떠나 ‘공공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막말로 ‘내 자식이 졸업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교육문제를 차분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가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는 ‘입시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욕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이 학교는 왜 입시에 신경 안 쓰냐’고 따지고, 졸업하고 나면 이에 관심을 끊어 버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학부모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정말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면 이 점을 숙고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건 억울하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학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협의하고 도와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간에 감정의 앙금이랄까 불신이 너무 많아요.

정은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합리적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교육자치의 기본단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원위원의 비율이 너무 작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교장을 매개로 국가의 통제는 먹히는데 교사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고, 학부모들도 동등한 주체라기보다는 교장의 들러리나 서다가 건의사항 정도 수렴해서 들이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국가의 전략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관철되고 설득력을 얻어 가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런 구조는 실질

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학부모를 내세워 시장주의 전략을 관철 시키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 하는 느낌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대라면 이런 구조는 국가의 억압에 대해 ‘교사-학부모의 연합 전선’의 의미를 떨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국가가 학부모를 앞세워 교사들을 형편없는 공급자라고 몰아붙이는 형세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사들이 자기가 공급하는 교육상품의 질을 검증 받거나 더 질 높은 상품을 요구받는 꺾끄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사들은 공급자로서 권력을 휘둘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웃음). 나라에서 만들어 준 교과서 가지고 시키는 대로 수업을 해 왔을 뿐이고, 진정한 공급자는 국가였지요. 그런데 국가는 자기 자리에 교사들을 앉혀 놓고 앞장서서 때리고 있으니 이유를 따지기 전에 교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요. 기본적으로 협력관계여야 할 교사와 학부모들을 이렇게 대립시켜 놓은 것이야말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동춘 저는 문제를 ‘민주화 없는 시장화’에서 찾고 싶어요. 민주화가 실패한 뒤에 ‘위로부터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그게 마치 민주화인 것처럼 내세운다는 거죠. 과거 군사정권 때는 학부모가 교육에 개입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학부모들은 교육 민주화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촛지나 관료적 교육행정이 자기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보니 그들에게는 ‘자식 사랑’이 교육의 전부이고 그 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일종의 공백상태가 돼 버린 거죠. 이제 국가주의가 퇴조하고 시장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이기적인 자식 사랑이 교육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수요자 중심주의’란 게 그걸 정당화시켜 주면서 부추기고 있는 거고요.

이수일 해체되는 가족질서와 미비한 사회교육 체제를 생각해 볼 때, 아직

은 중심에 놓여져야 할 것이 학교교육 아닌가, 공교육 무용론도 나오고 있지만 학교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사·학생·학부모 삼자의 유기적 결합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사 때리기’를 넘어 ‘학교 때리기’로 옮겨간다면 이것은 우리 교육체제 전반의 마비와 무력화까지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청소년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그들을 겨냥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청소년 문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소화해 내기도 벅찬데, 상업 자본이 뿌려 놓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청소년 문화의 폐해는 고스란히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 그 추가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은 끝이 없는 무한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교사가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에게 손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체벌인데, 체벌교사가 112 신고를 당하고 끌려가는 걸 본 교사들은 생활지도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런 수모를 당해 가면서까지 열 내서 지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젊고 의욕적인 교사들도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도해 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써 보다가 안되니까 일종의 절망상태에서 매를 들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교사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요자 중심주의는 이런 면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립시키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줌으로써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심성보 고언을 좀 드리자면, 전교조가 합법화된 뒤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큰 눈으로 교육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학부모, 학생,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교육의 시장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시기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도권을 상당부분 정부측에 넘겨주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살리기’, ‘교육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을 듣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앞으로 『교육비평』이 이런 새로운 움직임의 중심에 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기를 고대합니다.

박거용 우리 교육에는 또 하나의 막강한 주체, 숨어 있는 주체가 있어요 바로 교육부나 정부 기관에서 교육정책을 생산하고 공급해 온 교육학자와 교육관료들입니다. 정치 교육학적으로 이들의 이념적 계보를 추적하고 비판을 가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교육비평』이 그런 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의 문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재벌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족벌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왜 개혁을 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질은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김동춘 교육운동이 이제는 대학쪽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운동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학문 운동과 연계되어야만 근본적인 비판의 근거를 갖게 됩니다. 세계화라든지 경쟁과 효율성 같은 철학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공박하려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어디서 오는가’,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그런 인간이 과연 효율적인 인간이 될 것인가’를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식 인프라를 쌓는 것인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저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시장화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자립형 사립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들은 다 유학 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 교육은 끝나요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지식 인프라를 세울 거냐’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대학 교육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초·중·고 교육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교육운동이 이

제는 지역사회 쪽으로 시각을 넓혀야 해요. 사회교육 비중이 높아지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면 학생의 문제는 그 학생의 출신배경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곧 지역사회 문제이자 출신배경의 문제, 계층의 문제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학생지도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성보 저는 지식정보 사회 속에서 신지식인 상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비판적 지식인’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너무 왜소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신지식인’이란 것은 사회 전반을 투시하는 비판적인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아주 협소한 뜻의 인간상일 뿐이다. 방법적 가치에 치우친 ‘신지식인상’은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학교교육에서는 그런 인간상보다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수일 달라진 조건 속에서 새로운 담론을 세우려면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해요. 하나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계속 추구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새로이 제기되는 현대적 과제 즉 ‘현대문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담아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현대문명에 대해 장밋빛 꿈보다는 인간성 상실이나 생태계의 파괴 같은 위기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데, 결국 교육이 이런 화두를 끌어안아야 하지 않느냐. 종래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사회 정의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명론적인 위기와 인간성의 위기 문제도 포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나 생태주의 같은 다른 마인드들도 공교육 쪽에서 적극 싸안아야 하겠습니다.

사회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